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3707억 → 224억 축소”

이재의 미래통합당 의원
월성 1호기 검증 국회토론회

월성1호, 작년 12월 영구정지 결정
한수원, 경제성평가 축소 보고 의혹
감사원 결과 보고 늦어지며 논란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반년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4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이재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전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노후 원전이 됐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같은 안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원

에서 약 9개월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이재의 국회의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는 내·외부 두 차례 이뤄졌는데, 최초 내부 검토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후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 과정에서 2차례 경제성이 낮게 축소됐다”며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오늘 토론회에 제시된 검증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도 “산업부는 2018년 2월 20일 경 한수원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과 함께,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산업부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대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한 조치를 스스로 알아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당초 2012년 설계수명이 다하면서 2015년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화면 가운데)이 지난 4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라이브커머스에 등장, 부안참뽕간장새우와 고창 바지락라면을 판매하고 있다. /소진공

쇼호스트로 나선 조봉환... 전통시장 판매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주서 라이브커머스 생방송 출연
40분만에 완판행진... 330만원 매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가능성 제시

“참뽕간장새우가 맛이 참 좋습니다. 바지락라면도 기가 막힙니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이 부안전통시장의 ‘참뽕간장새우’와 고창전통시장의 ‘바지락라면’을 행사장에 들고 나왔다.

조봉환 이사장이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이들 지역 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다.

그가 소개한 ‘참뽕간장새우’의 ‘참뽕’은 오디의 다른 말로 전북 부안지역의 유명 특산물이다. 노화와 고혈압에 좋기로 소문난 오디와 서해안에서 잡은 새우로 만든 음식을 대한민국 동행세일 중 소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조 이사장에 앞서 동행세일 기간 중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갖고 진행된 라이브커머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

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출연했다. 이들은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파는 성과를 거뒀다.

이가운데 전통시장에서 만든 먹거리는 조 이사장이 이날 라이브커머스에서 처음 선보였다.

하지만 ‘시장이 과연 라이브커머스에서 통할까’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장관들에 이어 조 이사장도 이날 보란듯이 ‘완판 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실제 조 이사장은 참뽕간장새우 1kg 150개, 바지락라면 20개 들이 100박스를 30% 싼 가격에 내놓고 방송을 시작, 40분 만에 모두 판매해 33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 이사장은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비대면 거래에 취약한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장보기가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근거리 배송 등 비대면 거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전국 633개 전통시장이 참여해 경품행사, 공연, 장보기 체험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김승호 기자 bada@

산은, 900억 대출만기 올해 말까지 연장

한숨 돌린 쌍용차... 새 투자자 찾기 ‘집중’

경영정상화 위한 최소한 시간 마련
中-베트남 기업 등 3~4개 업체 관심

KDB산업은행이 이달 말 만기하는 쌍용자동차의 900억원 대출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하는 900억원의 대출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일 쌍용차가 연장신청 한 데 따른 조치로, 쌍용차는 이달 6일과 19일에 각각 700억원과 200억원의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가 잘 해결되는 것을 만기연장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외국계 은행이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쌍용차는 연체 상태에 놓여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6월 자산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

각 등으로 1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뒤, 만기가 돌아온 외국계 은행의 대출을 일부 상환·만기 연장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쌍용차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1년 내 도래하는 쌍용차의 단기 차입금은 3899억3296만원이다. 이 가운데 JP모건 899억원, BNP파리바 470억원,뱅크오브아메리카(BOA) 299억원 등 1668억원이 외국계 금융권에서 받은 단기 차입금이다.

현재 쌍용차는 2000억원 규모의 기안 산업안전기금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새투자자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1위 완성차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업체 BYD, 베트남 기업 등 3~4개 업체가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내유리 기자 yul115@

SO·PP 춘추전국... 사업자 간 갈등에 시청권 침해 우려

>> 1면 ‘콘텐츠 vs 플랫폼...’서 계속

경쟁력은 단연 콘텐츠다. PP 사업자들 또한 자체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작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태광그룹 계열 PP인 티캐스트는 LG헬로비전과의 협상에 실패해 LG헬로비전 케이블TV에서 티캐스트의 영상 영화 채널 씨네프가 빠지게 되기도 했다.

SO와 PP 모두 춘추전국 시대가 된 셈이다. 이번 갈등은 SO와 PP 간 경쟁력 우위 다툼이 프로그램 수수료로 인해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블랙아웃’으로 시청권 침해까지... ‘시청자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 나서야’

문제는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블랙아웃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들은 똑같은 요금을 내고 볼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시 보면 PP의 영향력이 커진 것의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걸맞게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은 시장에 맡기되, 시청자 보호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별 협상인 만큼 협상 자체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정부는 사업자끼리의 개별 협상은 존중하되 협상의 틀을 공정하게 세우고 ‘블랙아웃’ 등에 의해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청자 고지 등 시청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